

與 정부주도 '5극 3특' 완성 vs 기업유치 '지역경제 부활' 野

| '6·3 지방선거' 여야, 지역균형발전 미래성장 공약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완성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통합 등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유치나 정주여건 개선 등 시장 중심의 대응을 내세운 셈이다. 공공 주도의 '거시적 설계론'과 시장 친화적 '미시적 활성화'로, 양당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 것이라 분석이다.

◆민주당, '5극 3특'으로 지방 주도 성장 추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직접 연계된 '지방 주도 성장'을 당의 최우선 가치이자 1호 공약으로 선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을 5대 특별시와 3대 특별자치도 체제로 통합-인프라를 고도화하는 '5극 3특 체제 완성'이다. 5극 3특을 구현할 방안으로는 지방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꼽았다. 메가특구 내에선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과 금융 세제 등의 전폭적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창업도시 선정, 지역별 특성화 R&D 집중 투자 예산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에 종속되지 않도록 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밖에 생활권 20분 내 문화시설 접근

권 보장, 관광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1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 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전국 광역 철도 확충,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대도시 도시철도 구축 등 교통 공약도 마련됐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 공항에 취항을 유도하고 지방공항의 여객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공약집의 첫 페이지에 5극3특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담은 이유는 이번 선거의 승리가 영남·강원 등 지방에 달려있

다고 판단해서다. 수도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당으로서는 영남·강원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해야 대구·부산까지 탈환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특구 지정 등 특례 없이 기업 유치 등으로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ChatGPT가 생성한 6·3 지방선거 공약 이미지.

◆국민의힘,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

반면 국민의힘은 하향식의 대규모 행정 구역 개편이나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 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며,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주요 생산시설을 인구감소 지역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일정 기간 100% 법인세 면제, 향토기업 및 새로 이전한 기업 승계 시 고용유지 조건부로 기업상속세 전액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맞춤형 DSR 완화,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LTV 90% 상향 추진,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도 공약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프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민간 기업과 자본이 스스로 지방에 내려오도록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지방 대학에 계약학과 신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 기준 2배 상향, 지방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별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유산 발굴, 국가 숙박 및 식당 인증 브랜드 개발 및 등급화 등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ART FOR GYEONGGI



우리가 함께한 경기도 | 채소작



AI인프라 확충·기후위기 대응 VS 규제 철폐·민간 일자리 창출

'신산업 성장' 공약, 두 목소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신산업 성장'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 등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해당 분야에서도 양당의 기조가 전략적 공공 주도 성장,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나뉜 셈이다.

28일 양당의 지방선거 정당정책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은 AI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 인프라 확충, AI 대전환 추진, AI 기반사회 실현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내세워 여당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엔 GPU 조기 확보, 데이터센터 적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 독자 AI 모델 오픈소스 개방, AI 미래교육 강화, K-AI 시티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산업으로 바이오, 방산, K-컬처 등을 선정했다.

또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기후위기 대응도 미래 성장의 핵심 열쇠로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대응 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에 AI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K-녹색산업 전환, 전력시장 혁신, RE100 산업단지 중심의 '자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 전력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기술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지역 경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이 목표다.

이에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를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기술·신산업 진입 장벽 제거, 선진국에 없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 공론화를 위한 '규제혁신기준국가제' 설정을 공약했다.

/서예진 기자